

김동연 “여야, 경제 입법 책임있는 결정 필요”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해명 한국당 “컨트롤타워 의견 불일치”... 민주당 “갈등 조장 말라”

국회는 8일에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경제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벌였으며 교육위·외교통일위·국방위·여성가족위 등도 저마다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장들을 상대로 예산안 질의에 나섰다. 또 기획재정부·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 등 8개 상임위는 각각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회를 개최, 면밀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를 비롯한 여야 상임위에서 여야는 일자리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놓고 또 한 번 맞붙었다. 특히 예결위의 이날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전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 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부총리는 이를 부인했고, 여당은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이재익 의원은 “김 부총리의 어제 발언은, 문재인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이념적이고 좌편향적인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이 의원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

소한 대외적으로 청와대나 정부의 두 컨트론타워가 한 목소리가 나와 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김 부총리의 발언이 장 실장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언론에서 김 부총리의 발언을 장 실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최고위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는데, 김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해명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주 부추긴다. 어떤 실책을 근거로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수장을 지명했다, 원인은 부총리의 비판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언론이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며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예라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대립했다. 한국당 이재익 의원은 “문재인정부에 탈원전 청구서가 쌓여만 간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한전 적자는 8천억여원”이라며 “난데없이 새만금 태양광을 한다는데 지금 월성 원전 1기를 돌리면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현 의원은 “원전 제로화나 재생에너지 투자 등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순히 경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국민안전에 관한 정책은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송갑석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세 감면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8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조세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와 대회에 참가하는 임직원·선수·감독 등의 소득세 50억원 가량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낙연 총리로부터 국회 합의가 있으면 광주선수권대회의 국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비 추가 지원과 50억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대회인 광주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와 남북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통해 선수권대회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비대위, 전원책에 최후통첩

“전대 연기 불가... 조강특위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조강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에게 전당대회 연기는 불가능하고, 조강특위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의 전대 일정 등이 제시돼 있다. 어떤 경우에도 준수해야 한다”며 “조강특위가 기한을 어겨가며 활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 전대를 기점으로 역산하면 조강특위 활동은 1월 중순 이전에 종료돼야 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는 12월 중순 전후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조강특위는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 변호사에게)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발언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대위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같

은 입장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헌·당규약 사에게 전당대회 연기는 불가능하고, 조강특위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의 전대 일정 등이 제시돼 있다. 어떤 경우에도 준수해야 한다”며 “조강특위가 기한을 어겨가며 활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 전대를 기점으로 역산하면 조강특위 활동은 1월 중순 이전에 종료돼야 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는 12월 중순 전후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조강특위는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 변호사에게)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발언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대위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같



외통위 출석한 강경화·조명균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판문점선언 비준안 자동상정...야 “예산 통과 안돼”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절차...야 반대 입장 재확인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다. 또한 국회법은 ‘이 기간(20일)이 지난 후 30

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자동상정 요건을 갖췄다. 국회법상으로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상정됐다.

외통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회의에서 “여야 간사 회의에서 비준동

의안과 예산안을 분리해 각각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떨지는 의견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외통위는 지난 9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안전 협의를 통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되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정양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부의돼 심사를 받게 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야당은 이날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는 비준동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비용 추계 세목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는 비준동의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다 설명 비준동의 대상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하지 않는 한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합의

3당 원내대표 회동...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열기로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경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선 민주당과 정부가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세

우고 여야 간 추가 논의를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회동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